

10 오피니언

사설

문제는 수시·정시 비율이 아니다

지난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학교를 포함한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으로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 선발이 확대된 배경에는 수시 제도를 둘러싼 각종 불공정 논란이 있었다. 1997년 처음으로 도입된 수시 모집 방식은 2000년대에 들어 그 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80%에 육박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내신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과 잠재력을 평가해 입학을 결정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고 이는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어졌다. 수시 모집은 대입 선발 방식의 다양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선발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편법 사용 여

지가 있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교내 정기고사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정시 비율 증가가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일까? 수능은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불러일으켜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한다. 또 지역별로 상이한 교육 여건과 학생의 가정 형편이 수능 성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방안’에 대한 고등학교 교원 간담회에서 “현행 수능은 객관식 상대평가로 학생 간 무한 경쟁, 획일적인 점수 위주 선발, 수능 대비 문제풀이 수업 유발 등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시를 확대하면 공정성 훼손 문제가 생기고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 과열 문제가 생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할 것은 과도한 입시 전쟁, 학벌 만능주의, 무한 경쟁 등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 만능주의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다소 쓸쓸한 풍조를 불러일으킨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내신과 수능 공부를 병행하며 각종 교내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지면 사교육 과잉, 부정행위, 편법 활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학벌은 개인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이고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 대입은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경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확립된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행복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시 정시 비율 조정은 입시 해결책일 뿐이다. 우리는 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한 경쟁주의와 학벌 만능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입시 문제는 늘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교육·입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획일화된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인권센터 설립

기억될 침묵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중대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의 선한 사람들이 행할 그 침묵이 악인의 악행보다 더 선명히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 말도 남겼다. 아마도 그는 인권을 지키는 데에 중요한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를 범하는 일임을 지적하고 싶었을 것이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학교를 포함 182개 대학에 인권 증진 권고안을 보냈다. 여기에는 인권센터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많은 대학이 동참해 인권센터를 설치했고 2019년엔 그 수가 89개소에 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학교에는 의무로 정해진 성 평등 상담실만 존재하며 법적 조치를 보조할

전문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기획조정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라는 법안이 개정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학생단체의 건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생각해볼 때, 적극적으로 조치할 기회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 시점은 단순한 법적 기한일 뿐 구성원의 권리를 지키는 데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학생 19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학 후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46.4%에 달했다고 한다. 절반에 가까운 대학생이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3만여 명에 달하는 경희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성숙된 논의와 전문 인력이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 남은 시간을 이유로 침묵할 것인지, 혹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인지 - 경희의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만평 후회하지 않으려면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준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김가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송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

세시봉

과시용 힐링



하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최근 미라클모닝 챌린지가 MZ세대(20~30대) 사이에서 화제이다. 미라클모닝을 해시태그로 두고 챌린지에 도전 중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만 38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 기상 인증을 하고, 아침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공유한다. 줄넘기 또는 조깅을 한 시간씩 하는 사람부터 명상과 요가 및 언어 공부로 짝 채운 알찬 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 모습과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두 부지런한 자신의 아침을 자랑한다.

그런데 미라클모닝을 처음 소개하는 동명의 책에서 말하는 ‘본래의 미라클모닝’은 지금의 미라클모닝 챌린지와는 사뭇 다르다. 책의 저자인 할 엘로드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 6분만 투자하라고 말한다. 운동이나 공부와 같은 거창한 성과를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1분 정도 침묵하고, 다짐과 확신의 말을 되뇌이며 1-2분 일기를 쓰고,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기계발서를 한두 쪽 읽으라고 권할 뿐이다.

이처럼 미라클모닝의 6분은 하루를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SNS 속 미라클모닝 챌린지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대다수가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가꾸는데 힘쓰기보다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 새벽에 얼마나 많은 일과 공부를 했는지 과시하고 있다. 자신을 위한 작은 다짐의 시간조차 다른 이들과의 경쟁처럼 퇴색돼버린 것이다.

코로나블루로 활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성취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의 미라클모닝 챌린지는 격려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자기계발을 위한 힐링의 시간마저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된 것에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든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어 새벽에 기상을 하고 계획표를 이행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미라클모닝일까? 챌린지로서 인증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정작 추구해야 하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취감’이라는 단어 뒤로 자신에게 또 다른 부담과 책임의 짐을 얹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